

유예냐 시행이냐... 민주, '금투세' 이번주 결론 낸다

시간 끌면 부담만 증폭 판단
당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심기
"빈손 의총되면 더 비판받아"
"의견 더 수렴하자" 신중론도



국힘-민주, 부산서 표심 잡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을 찾아 부산시로부터 부산지역 의료 현안을 듣고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지 후보 선 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벌였으나,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고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상태다. 당시 민주당 내에선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연될 경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내에선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석·이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는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의 '설화'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도 유예론으로 더욱 무게를 추를 기울이게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추가하락 배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토론회 전날 금투세 시행 측에 섰던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 유권자에게 "이번 토

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29일 통화에서 "결론을 짓겠다고 모였다가 의원총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킨다는 등의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의정협의체 3주째 제자리

의료계 접촉·정부 설득 성과 없어...국힘내부 '여론 악화 우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감등 해법 창구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째 맞을 울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후 한 달간 의료계 인사를 전방위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해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회를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에도 '지난 27일까지 협의체 참여 의사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도 아직 받지 못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를 설득하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대표가 정부 설득의 기회로 계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는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당정 갈등 양상만 불거진 모양새다. 협의체 제안이 공회전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당 일각에선 한 대표가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당은 물론, 한 대표 개인 지지율까

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진다면 여론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현실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10·16 재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당내에서는 의료계 결국 불참하기로 결정하면 협의체 구성을 잠정 보류하고 사안을 장기과제로 남겨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마침표를 한번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전격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대표는 최근까지 주변 인사들에게 의료계 태도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화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한 대표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지금 노력은 시한을 걸어두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 앞에서 출구전략이라는 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힘, 野 '탄핵의 밤' 비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에서 연 '탄핵의 밤' 행사를 탄핵 선동으로 규정하고 "정권을 흔들려는 작태는 반드시 멈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속된 탄핵 선동은 마침내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의 '탄핵의 밤' 행사 개최로 절정에 달했다"며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극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생은 논의해야 할 공간에서 온갖 저급한 말들이 쏟아지고 마치 자신들이 국회를 점령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 것도 황당하지만, 국민의 대표를 저처하는 민주당 의원이 '탄핵 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탄핵의 구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기가 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은 도외시한 채 특만 나면 온갖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광장에 나가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아버지" 이재명 방안을 위해 민생마저 희생의 제물로 갖다 바치고 국회를 방탄조끼로만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수도권-지방 도시가스 보급률 불균형"

수도권과 지방 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 요금이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 평균 보급률은 91.3%였으며, 비수도권은 80.1%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이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도시가스 보급률 전량치 자료에 따르면 5년 후인 2028년에도 지역 간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여전히 편차가 컸다. 전국 평균 보급률은 88.9%로 추정됐으며, 수도권 94.6%, 비수도권 83.4%였다. 도시가스는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



요금에서도 불균형이 심했다. 올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 당 20.8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2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4336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강원 2.0253원, 세종 1.8389원, 대전 1.6232원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62.4%에 불과했던 전남은 소비자요금이 MJ당 23.8008원으로, 서울 대비 1.5054원나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금주 "20년 된 수산물이력제, 참여는 10%대"

수산물이력제가 도입 20년을 맞았지만, 참여비율은 여전히 10%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수산물이력제에 참여율은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37만 3760t 중 15만 3452t으로 전체 6.46%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대에 머물던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이 지난해 8.91%로 최고점을 찍은 뒤 올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수산물이력제는 식품안전성과 발생 시 역추적을 통해 신속히 회수 조치하고, 국민의 안전과 위협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확대를 위해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수산물이력제 근



거를 마련하고 대중성 품목 중점관리, 민간참여 이력제 등의 제도를 추진해왔다.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는 업체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27~758곳 사이에 머물렀으며, 올해도 659곳에 그쳤다. 2005년~2007년 시범사업 당시 344개소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 20년간 겨우 300~400개소가 증가한 셈이다. 국민 2명 중 1명은 이 같은 수산물이력제 제도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2019년 42.1%에서 2023년 45%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50%를 못 넘겼다. /오광록 기자 kro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